

# “재벌개혁, 기업활동 위축 아닌 경쟁력 제고 위한 것”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대규모 재난·사고 대응 시스템 정비 강조 수치보단 국민 삶이 3만불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주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방점을 ‘국민’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 ◆무술년 국정운영은 ‘국민’에 방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분야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와 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

를 언급하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의지

도 밝혔다.

공정경제 구축과 재벌개혁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될 ‘소득 3만불’도 수치보다는 국민들의 실제 삶이 3만불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민’이 빠진 채 이뤄진 것이어서 새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식으로 피해자들

배제할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됐다.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정권때 위안부합의 대가로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당사자인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경제성장률 3%대 ‘자신’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선 3%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성장률 2~3%를 ‘노멀’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선 산업 분야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도 과거엔 국가가 특정산업을 이끌었다면 이번엔 민간과 지자체가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4년 중임제가 바람직... 한미 안보공조 이상 없어

### 文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여소야대 국면... 야당과 소통·협력 중요 남북관계·북핵문제가 따로 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야당과 관계 설정 중요한데, 새해 맞아 영수회담 가능성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엔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만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개헌 연기와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대북관계와 관련해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으로,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미북갈등’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고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은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겠다. 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김승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치	·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계획 · 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 · 국회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개헌안 발의하는 경우 중앙권력구조 개편 등 이견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개헌 추진 ·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소통·협력 노력
외교	한일 위안부 합의 ·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이나 잘못된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치유 조치 이행 · 역사 문제와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할 것 ·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사죄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 · 치유금 10억 엔 처리는 시간을 두고 할머니, 일본 정부와 협의 UAE 의혹 관련 ·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출몰이 있다면 UAE 측과 수경·보완 협의 · 외교 관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나 전정부때 양국이 비공개 합의했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 있어
북핵 및 남북관계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함께 해결 ·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 ·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압박 강화 · 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임할 것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긍정적
경제	·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 ·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삶의 질 개선 ·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할 것 ·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고용 줄일 가능성 있지만 정착되며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
사회·문화	·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 ·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실행 ·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국민의당 통합 여전히 ‘평행선’... 분당으로 갈라서나

### 14일 의원총회 예정됐지만 강대강 대립 지속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과 반대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우선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10일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찬성하는) 전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당원의 뜻이 모였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너지효과 등도 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면서 “원래 계획한 통합일정을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손학규·김한길 전 의원 등 중립지대 의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손 상임고문과 김 전 대표 등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상황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곧 만나 여러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찬성과측도 통합추진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안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는 지난 8일 2차 공개회의를 열고 통합신당 강령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 구성과 신당의 당명을 이달 중 국민참여공모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찬성과 일각에서는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제성이 맞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당 반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은 “바른정당은 껌데기만 남았다. 이런 정당과의 합당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를 쌓아온 이들과 한순간 한 정당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승민 대표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이라며 “안 대표 역시 최근 이탈로 중재 의원들의 선(先) 대표직 사퇴, 후(後) 정당대회 제안을 놓고 대표실 백드롭처럼 진퇴양난이 됐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